

2021년 경제정책방향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활력복원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2021년 경제정책방향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활력복원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PART 1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활력복원

1 코로나19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경제를 적극적으로 운용합니다

- 01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기조를 이어가겠습니다 02
- 02 경제와 방역 간 균형을 도모하겠습니다 03
- 03 대내외 리스크를 촘촘하게 관리하겠습니다 04

2 확실한 경제반등과 활력 제고를 이끌어냅니다

- 01 내수경기를 빠르게 되살리겠습니다 05
- 02 투자개선 모멘텀을 본격 구축·확산하겠습니다 06
- 03 수출강국의 위상을 회복하고 강화하겠습니다 07

3 민생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합니다

- 01 안정적인 민간·공공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겠습니다 08
- 02 소상공인이 위기를 견디고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09
- 03 기업경영 안정을 도와 위기 돌파를 뒷받침하겠습니다 10
- 04 지역투자를 활성화하고 균형발전을 촉진하겠습니다[지역균형뉴딜] 11

PART 2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4 혁신을 확산시키고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합니다

- 01 디지털 혁신경제를 선도하겠습니다[디지털뉴딜] 12
- 02 벤처·창업을 활성화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13
- 03 세계일류 제조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14
- 04 서비스산업을 혁신하고 문화강국을 실현하겠습니다 15

5 안정적·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미래 대비에 힘씁니다

- 01 친환경·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겠습니다[그린뉴딜·탄소중립] 16
- 02 사람투자와 규제혁파로 생산성을 높이겠습니다 17
- 03 재정·공공·노동 등 부문별 구조를 혁신하겠습니다 18
- 04 인구감소와 저출산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18




6 경제구조의 포용성·공정성을 강화합니다

- 01 고용·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19
- 02 코로나시대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20
- 03 경제 전반 공정성과 상생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21
- 04 국민 안전과 삶의 질을 개선하겠습니다 21

코로나19 불확실성 대응 적극적 경제 운용

01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기조를 이어가겠습니다

☑️ 코로나19 위기 돌파를 위해 적극적 거시경제정책 기조 유지

재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 지속 + 상반기에 조기집행 최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 확장기조 견지('21년 예산 558조원, '20년 본예산 대비 + 8.9%) 상반기 역대 최고수준 조기집행 추진(상반기 집행목표 63%) ▶ (지방) 상반기 조기집행 집중(상반기 집행목표 60%) 및 지자체 추경편성 독려 * 지자체별 성립전 예산 사용 적극 활용 국고보조사업의 신속한 추경 반영을 위해 부처 공모절차 등 1/4분기 내 완료 	
통 화 금 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세 회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유지 • 정책금융 495조원 공급 등 실물부문에 대한 금융지원 지속 	
외 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적기 대응 (변동성 급격 확대시 시장안정조치 적기 시행) 	

☑️ 경제상황을 보아가며 한시적인 위기 대응조치는 점진적으로 정상화 추진 검토

기본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확산세 추이, 경기·고용흐름을 보아가며 질서있게 단계적으로 추진 •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조치 병행 	
기한이 임박한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년 초까지 기한이 도래하는 조치는 우선 연장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 : 매입기한 6개월 연장 추진(~'21.1월 → ~'21.7월) ② 코로나19 관련 무보 수출보험 보증 및 수은 수출기업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 만기 6개월 연장(~'20.12월 → ~'21.6월) * 신규 유동성 대출, 금융보증 우대, 중소 스피드업 수출입 대출, 긴급경영자금 대출, 수출실적 기반 대출 프로그램 등 5개 프로그램 	



코로나19 불확실성 대응 적극적 경제 운용

02 경제와 방역 간 균형을 도모하겠습니다

☑️ 코로나19 종식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역량 강화에 총력

코로나19 백신
확보·보급·개발
신속 추진

- 최대 4,400만 명분의 해외개발 백신 확보 및 접종 준비 본격화

* 코박스 퍼실리티(약 1,000만 명분), 글로벌 백신기업(약 3,400만 명분)

- 국내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신속 개발을 위해 임상시험 지원체계 구축* 및 비용 지원 확대

* 생활치료센터 내 임상모델 마련,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으로 해외 임상시험 지원창구 통합



취약지역
공공의료 보장

- 중증환자 치료병상 확충 및 필수 의료분야 인력양성 지원
-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추가지정(권역 12→15개, 지역 29→35개)



민관 협력
활용한
의료대응력 확충

- 의료 대응체계 구축에 대한 민간 의료기관 참여유인 확대
- 지자체·지역 시민사회가 협력하는 '참여형 방역 거버넌스' 강화



☑️ 코로나19 제약 하에서 병존 가능한 新내수 활성화 방안 추진

※ 방역 안정을 전제로 '21년 중에 추진할 계획

방역친화적 소비여건 조성	新관광 활성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4 바우처 및 쿠폰의 온라인 구매·사용 확대 * (예) 온라인 공연·PT, 비대면 포장·배달 등까지 사용 확대 • 선제적 방역강화 업체에 대한 방역우수시설 인증 부여^① 및 인센티브 확대^② ① 안심식당 지정제 운영 중 → 일정요건 충족한 타업종에도 적용 검토 ② 방역우수시설 위치정보 개방, 위생가점 부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비행 상품 활성화 ▶ (국내→해외) 내국인의 면세점 이용 허용 * 1인당 600달러 면세한도, 기내·시내·출국장·입국장면세점 모두 허용 ▶ (해외→국내) 철저한 방역조치 하에 국내 공항 일시 착륙 후 출국장 면세점 이용 허용

COUPON '21년 4+4 소비 바우처 및 쿠폰

바우처
농산물·우유급식·과일간식
(임산부 등, 106만명)



통합문화이용권
연 10만원
(저소득층, 177만명)



스포츠강좌이용권
월 8만원
(저소득층 등, 7.2만명)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국내관광 시
10만원 매칭(10만명)



쿠폰
농수산물
20%, 최대 1만원
(1,140만명)



외식
2만원 이상 5회 외식 시
1만원(660만명)



숙박
온라인예약 시
2~3만원 할인(145만명)



실내체육시설
월 이용권 구매 시
3만원 환급(60만명)



* 통합문화이용권 온라인 뮤지컬·연극·문화예술 감상 등에도 사용 가능

* 농수산물 쿠폰 온라인 구매 시에도 사용 가능

* 스포츠강좌이용권 및 체육 쿠폰 온라인 PT에도 사용 가능

* 외식 쿠폰 비대면 서비스(포장, 배달) 및 간편결제·배달앱 이용 시에도 사용 가능

☑️ 경제·사회 시스템의 회복력(Resilience) 강화 병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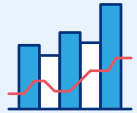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구조 변화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한 통계시스템 구축 등 위험요인 예측 시스템 강화
- 기업휴지보험*, 계약철회 손해보상보험 등 보험상품 개발 지원, 방역물자 비축 체계화 방안 마련 등 위기 완충능력 강화

* 갑작스러운 조업중단에 따른 고정비 지출 등을 보상하는 보험

코로나19 불확실성 대응 적극적 경제 운용

03 대내외 리스크를 총총하게 관리하겠습니다

☑ 위기 대응과정에서 늘어난 유동성을 감안하여 거시건전성 관리 강화

금융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중 유동성의 단기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국채 장기투자 유인 제고 및 주식 투자여건 개선 * (주식) 주식 장기보유시 세제지원 등 장기 투자활성화 방안 검토 (국채) 만기까지 보유시 금리·세제 인센티브가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 	
금융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권별 리스크 관리 강화 및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손실여력 보강 유도 	
가계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환능력 위주 대출심사 정착을 위해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 마련 * ① 금융기관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방식을 차주단위로 전환 ② 주택담보대출 상환능력 심사도 DSR로 단계적으로 대체 ③ 차주의 실제 상환능력이 반영되도록 DSR 산정방식 선진화 	

☑ 주택공급기반 지속 확충 등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총력 대응

수도권 127만호 차질없이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3기 신도시, 태릉 CC, 용산 캠프킴 등 활용하여 127만호 공급 •토지 보상자금 흡수노력 병행 * 대토보상권을 리츠에 현물출자하여 받은 주식에 대해 세제지원 확대 (예 : 양도세 감면율 15→30%) 	리츠·펀드를 통한 중산층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임대 공급확대 세제혜택 및 공모리츠·펀드 지원 ① 건설임대주택의 중부세 합산배제 기준 및 재산세 감면 기준 상향(공시가격 6억원 이하→9억원 이하) ② 건설임대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 및 리츠·부동산펀드도 임대사업자 재산세 감면 적용 ③ 공모 리츠·펀드가 건설임대 공급시 추가유인 제공 * 무주택자 우선, 시세이하 임대료→주택도시기금 융자금리 우대 제로에너지 빌딩→배당소득 분리과세 확대, 용적률 완화 등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기수요 차단 •실수요자 보호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임차인 보호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연내 7.5만호 공급 •HUG 임대보증금 보증료율 70% 인하 연장,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규모 확대 •임대차 3법 착근을 위한 기반 정비 * 임대차 분쟁조정위 확대(6→12곳)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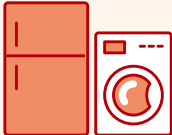
☑ 외환부문 안정적 관리 +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

외환부문 리스크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외신인도 및 외환건전성 안정적 관리 •외환건전성 규제 점검·보완 * ① 증권·보험업권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② 비은행권 외화유동성 비율 규제 개선 ③ 외환건전성 부담금 정비(예: 분할납부 횡수·비율 조정 등) 	대외 통상환경 변화 대응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가칭)』 수립 •대외·통상현안별 세부 대응방안 마련 * 美 新정부 출범, 상계관세, 브렉시트(Brexit) 등 •국가식량계획(NFP) 수립 등 식량안보 기반 강화
---	--



확실한 경제 반등 * 경제활력 제고

01 | 내수경기를 빠르게 되살리겠습니다

✓ 소비 리바운드(Rebound)를 위해 전방위적 인센티브 제공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소득공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가전기기 구매 환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년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에 추가 소득공제 신설 * (예) '20년 대비 5%이상 증가분 대상, 공제율 10%, 공제한도 100만원 (기본 공제한도와 별도로 한도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년 상반기까지 자동차 구입 시 개소비세 30% 한시 인하 (5→3.5%, 100만원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환급 (500억원, '21.3~12월) * (예) 한전이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자에 한해 20% 환급 

✓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 여건을 빠르게 조성·진작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11.5→18조원) 지역 내 배달앱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결제 가능토록 개선 공무원 연가보상비(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조기 지급('21.4월~) ※ 단, 동의를 전제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표 소비행사를 분산 개최하여 연중 소비분위기 확산 * 상반기 「대한민국 동행세일」, 하반기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 방역 안정을 전제로 '21년 중에 추진할 계획 	

✓ 국내 관광 회복으로 내수활력 제고 뒷받침

※ 방역 안정을 전제로 '21년 중에 추진할 계획

- 5대 관광거점도시 인프라 확충('21년 383억원)
* (국제 관광도시) 부산광역시 (지역관광 거점도시) 강릉/전주/목포/안동시
- 스마트 관광도시 추가 선정('21년 신규 3개소)
- 지방공항 입국 외국인을 위한 '코리아 토탈 관광 패키지' 도입
* 교통거점 관광안내소, 지역특화 숙박시설 조성, 스마트 관광안내시스템, 환승관광, 생태녹색관광, 레저스포츠관광



- 창업초기 중소 관광기업 및 관광벤처기업을 위한 관광기업 육성펀드 출자 확대 (300→450억원)






- 새로운 관광 트렌드에 대응하는 '포스트코로나 대비 방한관광 활성화 전략' 마련



확실한 경제 반등 * 경제활력 제고

02 투자개선 모멘텀을 본격 구축·확산하겠습니다




✓ 공공·민자·기업투자 프로젝트를 100→110조원으로 확대

 공공기관 60→65조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주택, 철도·고속도로·항만 등 SOC 기반 확충, 발전소 건설·시설보강, 한국판뉴딜 투자 등 중심으로 추진
 민자사업 15→17조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철도 등 기존 유형의 민자사업뿐 아니라 그린 스마트스쿨 등 新유형 사업까지 적극 발굴·추진
 기업투자 25→28조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해관계 조정·제도개선 등 투자애로를 적극 해소하여 18조원 규모 대규모 투자프로젝트를 신규 발굴하고, 既 발굴한 프로젝트 중 '21년 10조원 규모 착공 지원 <p><small>* (예) 화성 복합 테마파크, 고양 콘텐츠파크,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데이터센터, 구미 이차전지 소재공장</small></p>

✓ 기업의 투자욕을 끌어올리기 위해 세제·금융 적극지원

설비투자 가속상각 허용	공장 자동화설비 관세감면	설비투자 정책금융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년 설비투자에 대해 가속상각 한시 허용 <p><small>* (중소·중견) 사업용 고정자산 → 내용연수 △75% (대기업) 혁신성장 투자자산 → 내용연수 △50%</smal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중견기업이 공장 자동화설비 도입 시 관세 감면을 한시 확대 <p><small>* [중소] 50→70% [중견] 30→50%</smal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설비투자 지원에 정책금융 23조원 이상 집중 투입 <p><small>* 혁신성장 지원자금 (중진공 1.15조원), 시설자금보증 (신보 4.5조원, 기보 1조원) 등</small></p>

✓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유턴기업 중심으로 지원제도 개편

첨단산업 유턴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사업장 축소기준(現 25% 이상→예외 인정), 동일제품 생산기준(現 표준산업분류상 동일 소분류 업종→예외 인정) 요건 유연화 비수도권 첨단투자 시 유턴보조금 추가 지원 (現 첨단산업, 지역 주력산업에 지원비율 2%p 가산→5%p로 상향) 	
협력형 유턴 성공사례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2개 이상 기업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동반 복귀 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사업장 축소기준 완화(現 25→10% 이상) 동반복귀 기업간 사업장 인접요건 폐지 유턴보조금 지원비율 최대 5%p 상향(現 지역별로 투자액의 21~44%) 	
전략적 유치로 유턴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협상을 통해 현행 지원수준 이상의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 <p><small>* 인정요건 유연 적용(해외사업장 감축요건, 동일제품 생산요건) 유턴보조금 지원비율 최대 + 5%p, 정부 보조사업 참여 우대(최대 3개)</small></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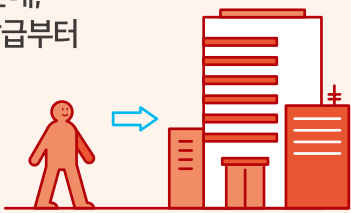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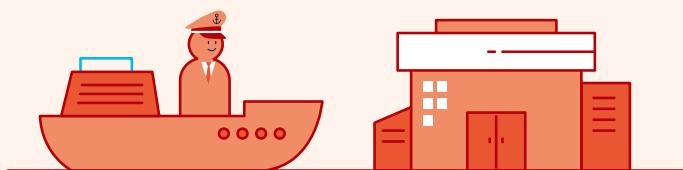
✓ 생활 SOC 투자를 11.0조원으로 확대(+0.5조원)하고, 청·관사 복합개발 7건(주택 1,400호, 6,900억원) 등 건설투자 지속

- 생활 SOC 복합화 438개 선정('20년 289개, '21년 149개)
- 공공임대 주택 복합화 사업 추진

확실한 경제 반등 * 경제활력 제고

03 수출강국의 위상을 회복하고 강화하겠습니다

수출기업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지원 지속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운영기한 연장 ('20년 → '21년말)	'격리 면제서' 발급제도 개선 및 신속통로(Fast-Track) 확대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 출입국 정보 안내, 건강상태 확인서 발급부터 전세기 운항까지 원스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격리면제서) 12개 부처 → 종합지원센터로 창구 단일화 및 유사서류 통합·개선 (신속통로) 기업 수요가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예외적 입국을 허용하고 입국절차를 간소화하는 "신속통로(Fast-Track)" 확대
영세 수출중소기업을 위해 전용 선적공간 확보 + 장기운송계약 체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시선박 월 2척 이상 투입, 중소·중견기업에 50% 제공 긴급항로, 중소·중견기업에 선적공간 45% 우선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운송 계약 체결 유도 (우수 선·화주 인센티브 강화, 중진공의 계약 대행 추진) 저렴하게 이용 가능한 해외 공동물류센터 개장 (인니, 로테르담·바르셀로나항) 국적 선주사 육성 (해양진흥공사 운용리스 방식 도입) 40피트 컨테이너 박스 4.3만 개 확보하여 장기리스 제공

수출금융 255.8조원 집중 지원(무보 167.0, 수은 72.1, 신보 13.0, 기보 3.2, 중진공 0.5조원)

- 신시장 진출지원자금(5천억원), 수출실적 보유기업 우대보증(3.2조원) 등
- 코로나19 관련 수출기업 유동성공급(수은) 및 수출보험·보증 만기연장(무보) 지원기한을 '21년 상반기까지 연장

비대면 판로 개척 등 새로운 수출환경에 선도적으로 대응

- 수출중소기업 제품이 온라인 전시회를 통해 실제 계약될 수 있도록 샘플 배송비용 등 지원(기업당 최대 1천만원)
- KOTRA 화상상담 종합 플랫폼 구축('21.1분기)
- 온·오프라인 한류행사(KCON 등)와 연계하여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온라인 수출지원 확대 (공식 홈페이지·온라인 공연 플랫폼과 연계하여 중소기업 수출 제품홍보·구매 지원)



FTA·양자경협 등 국제협력 기반 수출지원 강화

- FTA 협상 진전 추진 및 주요 거점국(미·중, 신남방, 신북방 등)과 양자 실질경협 강화
- 對개도국 경제협력 강화 및 전략적 민간투자 확대 등을 위해 공공부문(수은 등)의 개발금융 기능 활성화방안 마련('21.2월)

*개도국 민간기업 대출·보증기능 강화 등



민생 개선 * 지역경제 활성화

01 안정적인 민간·공공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겠습니다

일 자리를 지키는 기업을 지원하여 민간일자리 창출에 총력

고용증대세액공제* 한시 개편

* 전년도보다 상시근로자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3년간 소득세·법인세 1인당 400~1,200만원 공제
(단, 2년 내 고용감소 시 지원 중단+공제액 상환)

- '20년 일시 고용감소 기업에 대해서는
공제지원 유지 → '21년 고용확대 유도

The diagram illustrates the policy's intent to maintain support for companies that saw a temporary drop in employment in 2020. It shows a flow from 2019 to 2020 (where a temporary decrease occurred) and then to 2021 (where employment is expected to expand), with a line indicating that the tax support continues through 2021 for these companies.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 고용약화 우려 업종의 기업·근로자에 금융·재정 등 지원

- 조선업 지정기간 연장(~'21.12월)
- 필요시 8개 업종(~'21.3월) 연장도 검토

여행

관광숙박

관광운송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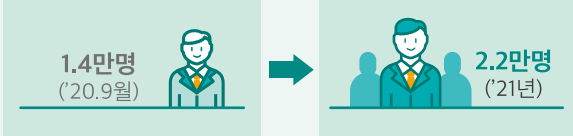
항공기

면세점

전시·회의

공항버스

코로나19로 취업기회를 잃은 청년에게 '일 경험' 제공 : '10만 청년 일경험사업' 추진(민간 8만명 + 공공 2만명)







민간일자리 : 8만명	공공일자리 : 2만명
 <p>• 청년 디지털 일자리(5만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2.6만명) 등</p> <p>• 디지털신기술 직업훈련과 연계하여 프로그래밍 · 빅데이터 분석 등 훈련 지원 * 내일배움카드(K-Digital Credit, 50만원) 활용</p>	 <p>• 공공기관별 내실화 계획 수립 + 운영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p> <p>• '21년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 시 우대 (5% 이상은 해당 기관 일경험 참여자로 채용)</p>

취약계층 직접일자리를 늘리고 공공일자리를 빠르게 채용 : 일자리예산 30.5조원으로 확대 + 조기집행 적극추진

- 일자리예산 확대
('20년 25.5 → '21년 30.5조원)

- 취약계층 직접일자리
104만개 제공(1월 중 50만명 이상 채용)




- 국가직 공무원(일반직)을
3/4분기까지 70% 이상 채용

'20년	'21년	
 25.5조원	 30.5조원	+5조원
 95만명	 104만명	+10만명
 3%	 70% 이상	1월 중 50만명 이상 채용




민생 개선 * 지역경제 활성화

02 소상공인이 위기를 견디고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 임대료·공공요금·결제수수료 등 소상공인 부담 경감 지원

임대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연장(인하액의 50%)(~'21.6월)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확대*(~'20.12~'21.6월) * 부동산업은 정책자금 미지원 → (개선) 임대료 인하시 한시 허용, 소상공인진흥공단 정책자금 뿐 아니라 신보·기은 정책자금까지 지원 확대 국·공유재산 임대료 인하기간 연장(국유재산 : ~'21.6월말, 공유재산 : 지속 유도) 	
공공요금 · 세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요금) 소상공인 납부기간 3개월 추가 연장(~'21.3월분) (세정·세제) 세무검증 배제조치 1년 연장(~'21년말) 및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기준 등 상향* *(간이과세) 연매출액 4,800→8,000만원, 단 부동산임대업·과세유형업은 기존 기준 유지 (납부면제) 3,000→4,800만원 	
카드·결제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세 소상공인 등의 신용카드수수료 부담을 검토하여 합리적 개편방안 마련('21.12월) ※ 관계부처 및 가맹점·소비자단체·카드사 등 이해관계자, 민간전문가 의견 수렴 온라인쇼핑몰·배달앱 등에 제로페이(소상공인간편결제) 확산 추진 * 통상 3.2% 내외인 온라인결제 수수료에서 1%p 이상 인하 가능 	

✓ 신용회복·재기지원 강화로 위기 후 재도약을 적극 뒷받침

신용회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영업자¹²³ 프로그램(자영업자 채무조정 특례) 지원 확대 (업력 1년 이상 휴·폐업 자영업자 지원 → 코로나19 피해로 휴·폐업 시 업력 무관 지원) 개인연체채권매입펀드(2조원 규모, 캠프) 매입대상을 '21.6월말까지 발생한 연체채권까지 확대(6개월 연장) 	
재기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업 시 세무·법률상담 및 재창업 사업화 비용지원 강화 * (법률자문) '20년 3천건 → '21년 4천건, (사업화지원) '21년 1,200명 신규 지원 	
교육·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기지원 교육 이수자에 대해 민간·공공기관과 연계하여 사업 노하우 전수, 취업·재창업 기회제공 등 확대 추진 ※ (예) 나와 협업하여, 재기지원 교육 이수 후 재창업 시 1년간 보증금 없이 입점 지원 	








✓ 비대면 트렌드에 대응한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지원

비대면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희망리턴 패키지」와 연계 운영 중인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대상에 비대면 사업 포함 (비과밀업종 전환 시 지원 → 비대면·혁신아이디어는 업종 무관 지원) 「소상공인 구독경제화」(선결제+정기배송) 지원방안 마련('21.4월) 	
--------	--	--

민생 개선 * 지역경제 활성화

03 기업경영 안정을 도와 위기 돌파를 뒷받침하겠습니다

✓ 기업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 지속

중소·중견기업 정책금융 지원 확대		기업 자금조달시장 안정화	
			
'20년 285조원		'21년 302조원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한 6개월 연장 추진 (~'21.7월)
		코로나19 피해대응 P-CBO	11.7조원 발행 ('20~'22년)
산업생태계 상생·협력 강화 : 공동프로젝트 보증 확대			
			
'20년 300억원		'21~'23년 3,000억원	
		 공동프로젝트 보증	제조업·부품 등 협력관계에 있는 복수 기업이 추진하는 공동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협력업체에 대한 보증을 일괄 심사·지원

✓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방위적 사업재편 지원

- 수요-공급기업 간 공동 사업재편 3종 인센티브 제공

세제지원	R&D	정책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재편 계획 이행에 따른 자산매각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특례의 요건 완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재편 펀드('21년 200억원) • 전용R&D 우선지원('21년 10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연계 등 정책금융 지원 병행 * 설비투자 지원, 수출 신용보증 한도 확대 등 

- 선제적이고 신속한 사업재편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지원 확대

1 (발굴·승인) 사업재편 신청서 간소화 및 서면심사 적극 활용으로 심의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

2 (사업재편) 양도차익 과세이연 혜택 유지를 위한 부채비율 요건 완화^①, 등록면허세 감면(50%) 대상 합리화^② 등

* ① 사업재편계획 이행에 따른 사업용 설비 → 사업용 건축물도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② 과잉공급 해소 및 생산성 향상 투자 한정 → 신산업 진출기업 등도 포함

3 (사후지원) 산업·자금·고용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재편촉진지원단 구성하여 기업과 맞춤형 매칭·주기적 점검

✓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하여 구조조정 지원시스템 효율화·체계화

- 자본시장 중심의 선제적 구조조정체계 구축방안 마련(관계부처 TF 운영)
- 기업구조혁신펀드 1조원 확대(2.7 → 3.7조원)

04 지역투자를 활성화하고 균형발전을 촉진하겠습니다

✓ '21년 중 지역균형 뉴딜 성과 가시화를 위해 한국판뉴딜 지역사업·지자체 뉴딜·공공기관 뉴딜 본격 추진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선정 시 균형발전 요소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등 지역균형발전 적극 고려 디지털·그린 분야 중심으로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21.上) 등 신속 확산 추진
지자체 주도형 뉴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 자체추진 뉴딜사업에 대해 지방재정 투자심사 면제 등 절차 간소화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등 뉴딜 우수지자체에 인센티브 제공 지역균형 뉴딜 분과를 통해 지자체 애로사항 신속 협의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 주도 10대 협업과제 추진 TF('20.9월~)를 통해 추진현황을 점검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뉴딜사업 추진실적을 반영하여 성과창출 지원 지역 민간·공공기관 및 모태펀드가 참여하는 '지역뉴딜 벤처펀드' 조성

✓ (지역경제 재생) 균형발전프로젝트·혁신도시^{시즌2} 이행 + 산업단지 근무환경 개선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혁신도시 시즌 2	산업단지 근무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계·착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사업 10대 과제 적극 추진(485억원) * 이전공공기관 보유 자원으로 지역특화산업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단지 내에 다수 복지 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 '멀티플렉스' 신설 추진 (시범사업, '21년 2~3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증·사업화 		

✓ (살기 좋은 농촌) 인구유입 지원, 공간 고도화 등 다각적 접근

- 지방이주 청년의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청년마을을 12개소로 확대(1→12개소)

청년마을 인구감소 지역에 주거·교육 및 커뮤니티·창업공간을 조성하여 청년 정착을 지원

- 한국판 뉴딜과 농촌공간 정비사업('21년 신규)을 연계하여 디지털 기반구축·사회서비스 활성화 추진
- 스마트팜 확산(AI경진대회 추진, 일반농업인 대상 교육) 및 기술 고도화를 위한 다부처 패키지 R&D 추진

혁신 확산 *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디지털뉴딜]

01 디지털 혁신경제를 선도하겠습니다

💰 '21년 중 총 **12.7조원** (국비 7.6조원)
→ D.N.A·디지털경제, SOC 디지털화 등
체감성과 창출

✓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정비 및 데이터 활용 강화

- 민관합동 데이터거버넌스 구축, 데이터기본법 제정 등 기초인프라 정비
- 산업별 빅데이터 및 금융·의료·교통·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
- 소상공인을 위한 상권분석 빅데이터 고도화 등 데이터 활용 강화(로드맵 마련, 민관협의체 발족 등)

💡 마이데이터(Mydata)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통합관리하여
자산·건강관리 등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원
(예) 신용정보 통합조회 + 신용·자산관리서비스 제공 등








✓ 5G 확산 촉진 + 6G 핵심기술 선제 확보

5G 확산 가속화	6G 핵심기술 확보노력 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축) 5G 시설투자(취득·공사비 포함)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율 2%p 우대 * (대기업) 1→3% (중견) 3→5% (중소) 10→12% • (확산) 공공분야(안전·보건)·미래산업 등에 5G기반 융합서비스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 6G 관련 6대 중점분야를 대상으로 R&D투자사업 본격 개시('21~'25년) * 초성능·초대역·초정밀·초공간·초지능·초신뢰 • (국제표준) 표준특허 확보 지원 (해외 연구기관 협력회의 개최,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 등)

✓ AI 활용기반 강화 + 쏠산업 AI 융합 확산

- (활용) 중소기업·스타트업 AI활용 바우처 200개 지원('21.6월~)
- (확산) 자동차·선박 등 핵심산업, 보건, 공공서비스 등에 AI 특화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 추진

✓ 비대면 경제 선도 + SOC 디지털화 추진

분야별 “비대면경제” 인프라 구축	SOC 디지털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기반 시스템·서비스 구축·고도화 및 활용기기·플랫폼 보급 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대 SOC 분야 디지털 관리시스템 구축 (예 : 전국 도심지 3D 지형지도 구축, 3D 건물지도 구축 등)
<div>      </div> <div> 의료 돌봄 교육 유통 금융 </div>	<div>     </div> <div> 도로·철도 공항·항만 수자원 재난대응 </d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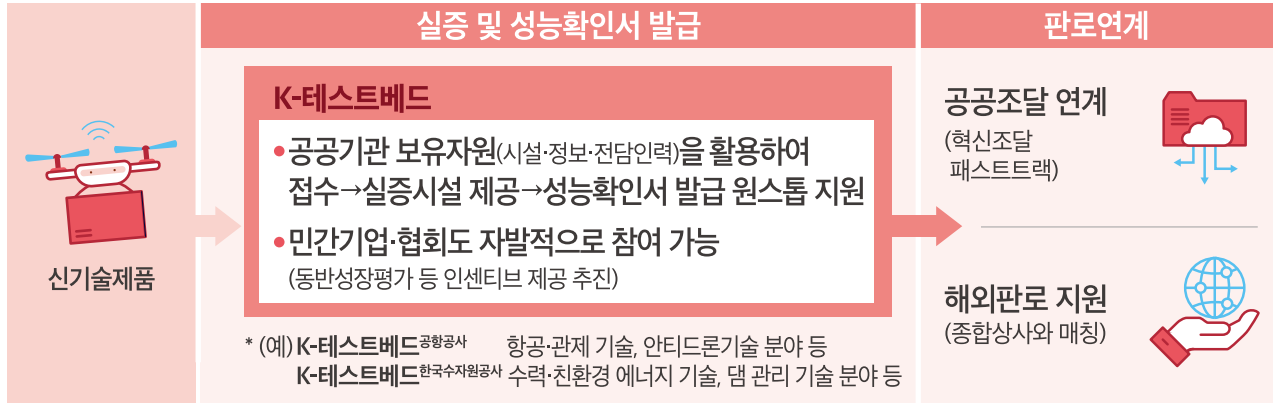
✓ 뉴딜금융 본격 확산

- (정책형 뉴딜펀드) '21.3월부터 4조원 목표로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 개시 + 성과창출을 유도하는 유인체계 도입
* 3년차부터 관리보수를 약정액이 아닌 투자잔액 기준으로 지급
- (뉴딜 인프라펀드) 관련법령 개정 등을 조속히 완료(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9%, 2억원 한도) 혜택 등)
- (민간 뉴딜펀드) 다양한 ‘뉴딜지수’를 개발·활용하고, 뉴딜지수 연계 투자상품 출시 유도(ETF·인덱스펀드 등)
- (정책금융) 뉴딜 분야(연계품목 200개) 대상 17.5조 +a 규모 정책금융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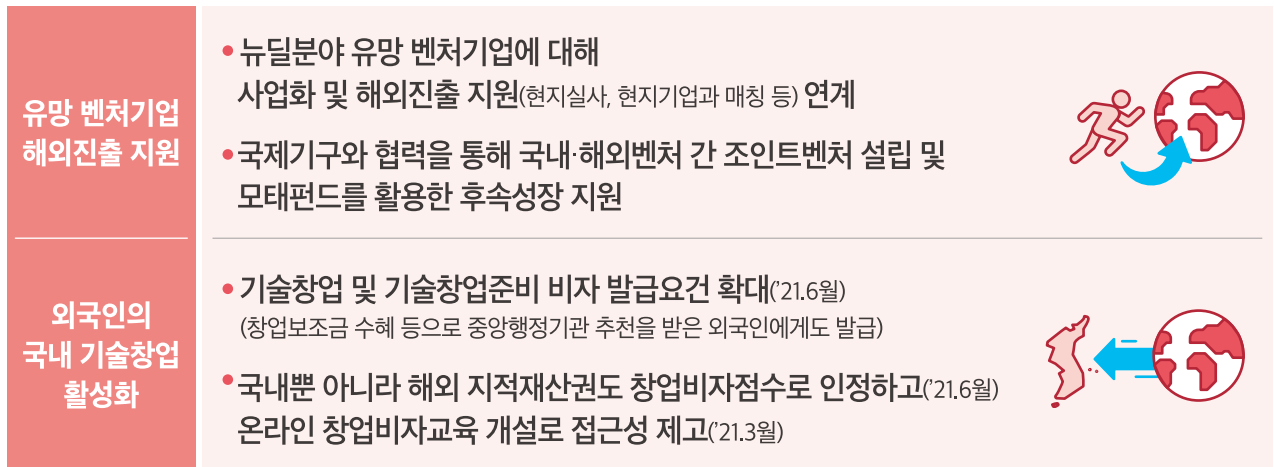
혁신 확산 *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02 벤처·창업을 활성화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 신기술기반 제품 실증을 지원하는 K-테스트베드 체계 구축



✓ 국내 벤처생태계의 글로벌화 촉진



✓ 벤처자금 공급저변 확대 및 육성·지원기반 강화

- “실리콘밸리(은행)식 투자조건부 융자제도” 도입

→ 은행 등이 투자기관과 심사정보 등을 공유하며, 후속투자 자금을 통한 대출상환을 조건으로 신주인수권을 부여받고 기업에 초기자금을 저리에 대출
- 벤처투자를 받은 중소·벤처기업이 정부R&D사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참여제한요건 개선

* (현행) 부채비율 500%(산업부) 혹은 1,000%(중기부) 이상 기업은 정부 R&D사업 참여 제한
 (개선) 신규 벤처투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상환전환우선주’는 부채비율 산정시 제외

✓ 유망 벤처육성 3대 프로젝트 본격화 + 「창업지원 3개년 계획」 수립

- 1 K-비대면 글로벌 혁신벤처 100** '21년 중 비대면 유망스타트업 200개 발굴
- 2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21년 중 비대면+바이오+그린뉴딜 분야 1조원 조성
- 3 K-유니콘 프로젝트** “아기유니콘→예비유니콘→유니콘 기업” 스케일업 생태계 조성

혁신 확산 *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03 세계일류 제조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 BIG3(미래차·바이오·시스템반도체) 성장동력화를 강력 추진

미래차 대중화 시대로의 전환 가속화

- 자율주행차 상용화 대비 제도 정비, 국민 생활·이동거점을 중심으로 전기·수소차 충전인프라 구축, 미래차 사업재편 희망기업에 R&D 지원, 중소·스타트업을 위한 미래차 펀드 조성(2천억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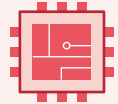
바이오산업의 미래 성장동력화

- 화이트(화학·에너지)·그린(농업·식품)·레드(보건·의료)바이오 분야별 지원 강화(R&D, 시설·장비 등), 바이오 클러스터 고도화,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23년 완공) 등



시스템반도체 육성으로 반도체 新 격차 창출

- 차세대 반도체 펀드 조성(500억원), 첨단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추진, 반도체 공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 원천기술 선점 추진 등



- (추진체계) 혁신기업 1,000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대·중소기업 간 시너지 창출 도모 + 범부처 추진체계* 구성

*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 경제부총리(위원장), 과기·산업·중기·복지부·금융위(5개부처 장관) 및 BIG3 산업별 기업·전문가

✓ 혁신을 통한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 제조업 전반에
Data·Network·AI를 적용한
디지털 전환 가속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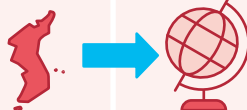
- 투입·공정·순환 등 밸류체인 전반의
친환경 전환 추진
▶ '21년 중 클린팩토리 300개 구축 등



✓ 소재·부품·장비 2.0 성과 확산

국내 밸류체인 공고화

- 338개+α 핵심품목 공급 안정화 지속 추진 및 20대 우선순위 품목 연내 공급 안정화 완료 (기술개발, 해외M&A, 해외투자유치 등)
- 공급망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수요-공급기업 간 신규 협력모델 추진 ('21년 중 20개 이상)
- 국가핵심소재 연구단 확대(32→57개) 및 미래 선도품목에 대한 도전적 R&D 지원



글로벌 진출 확대

- 국내 공급 안정화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 적극 진출할 “소부장 으뜸기업” 20개+α 선정
*R&D-실증-성장자금·규제하이패스 등 선정된 기업에 집중 패키지 지원
- 국내 공급기업과 해외 수요기업 간 구매조건부 R&D 및 해외 공급망 참여 지원

혁신 확산 *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04 서비스산업을 혁신하고 문화강국을 실현하겠습니다

✓ 서비스산업 혁신 가속화

서비스산업 육성기반 확충	유망 신서비스 산업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을 조속히 추진 •(한걸음모델) 법적 근거 마련 등으로 제도화 및 1분기 중 신규과제 적극 발굴 •(서비스R&D) 재정투자 확대 (‘16~’20년 4조원 → ’21~’25년 7조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환) 환전·송금 위·수탁 등 신규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신사업 규제 신속확인·면제제도 지속 운영 •(반려동물) 관련제품(사료 등)·서비스산업(펫 보험 등)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물류) 중소기업을 위한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구축 본격 추진(3개소), 첨단물류설비 확충 용자 신설 등

✓ 문화강국 도약 프로젝트 본격 추진

- 한류 성과가 지속·도약하도록 전방위적 지원 집중

 新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콘텐츠 다양화 + 연관산업 동반성장 •코로나 피해 콘텐츠 기업 재기지원 펀드 조성(250억원) 	 1인미디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무공간·제작 시설 등 특화인프라 조성으로 우수 제작자를 적극 육성
 게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블록체인, 클라우드 등 신기술 기반 게임 및 5G 활용 온라인 실감형 게임 등 제작 지원 	 문화예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감형 공연콘텐츠 등 비대면 온라인 예술 활동 지원 •문화접대비 일몰 연장(~22년말)
 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대면 전시플랫폼 등 박물관·미술관의 온라인 전시 환경조성 지원 	 스포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포츠용품 제조·비대면 스포츠 서비스 등 산업육성 지원 (스포츠펀드 130억원 출자 등)
 K-뷰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부과학 기술 개발 등 산업경쟁력 제고 지원 •해외 진출 지원도 강화 		

- 취약계층 문화향유 지원 및 청년·신진예술인 창작기반 확대 :

- 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20년) 171만명, 1인당 9만원 → (’21년) 177만명, 1인당 10만원)
- ② 청년예술가(~만39세) 창작활동 경비 및 신진예술인(예술경력 2년 미만) 창작준비금(신규) 지원

- 문화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 지속 발굴·추진 :

정부뿐만 아니라 개인·기업 차원에서도 문화소비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도록 지원

안정 * 지속성장을 위한 미래대비

[그린뉴딜 · 탄소중립]

01 친환경·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겠습니다

₩ '21년 중 총 13.2조원 (국비 8.0조원)
+ 녹색금융·배출권거래 활성화 병행

✓ 2050 탄소중립 "Net-Zero" 시대로의 이행 본격화 : 「2050 탄소중립 3+1전략」 추진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	제도적 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전환 가속화 고탄소 산업 혁신 미래모빌리티로 전환 도시·국토 저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유망산업 육성 혁신생태계 저변 구축 순환경제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약 산업·계층 보호 지역중심 탄소중립 실현 국민 인식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제도 개선 녹색금융 활성화 기술개발 확충 국제협력 강화



- (추진체계)^(가칭) 2050 탄소중립위원회(대통령 직속, 민관합동) 등 추진체계 구축
▶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조속히 상향)
- (전략) ①탄소중립 시나리오('21.上) → ②핵심정책 추진전략('21.下) → ③국가계획 반영('22~'23년) 순서로 질서있게 준비·추진

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② 핵심정책 추진전략 수립	③ 국가계획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탄소중립을 위한 부문별 감축 잠재량 분석 복수의 시나리오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나리오를 토대로 에너지·산업·수송 등 분야별 전략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 법정계획 정비 *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등

✓ 그린뉴딜을 통한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가속화

녹색 인프라·녹색에너지	녹색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8.3만호) 그린스마트 스쿨(761동) 사전기획 착수 국민체감형 도시숲 구축 스마트 전력망 구축(138.5만호) 및 노후건물에너지 DB화(800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5대 선도분야 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 * ①청정대기(광주), ②생물소재(인천), ③수열에너지(춘천) ④미래폐자원(폐배터리 등 2차전지), ⑤자원순환(탈플라스틱) * 녹색산업 첨단기술 개발 → 생산 → 판로 연계 2차 그린뉴딜 유망기업 30개 신속히 선정 * 기술개발, 사업화자금 등 3년간 최대 30억원 집중 지원

✓ 녹색금융·배출권 시장 활성화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마련('21.6월) ▶ 「10대 산업분류별 81개 하위 경제활동(안)」 분류 금융기관 등 제3자의 배출권 거래시장 참여 허용 	
상품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내선물 등 파생상품 도입방안 마련 ▶ 배출권 가격 발견기능 제고 및 시장 예측가능성 확대 	




안정 * 지속성장을 위한 미래대비

[뉴딜 사람투자]

02 사람투자와 규제혁파로 생산성을 높이겠습니다

₩ '21년 중 총 0.8조원 (국비 0.7조원)
+ 직업훈련 혁신·포용성 제고노력 병행

✓ 직업교육·훈련의 개선·혁신을 통한 사람투자 집중

뉴딜(신산업) 연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년까지 디지털·그린뉴딜 선도인재 30만명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년 내 3.6만명 양성 ▶ 정부 인력양성 사업 효율화 + 인력양성 트랙 구축 • 산업계 수요를 중심으로 뉴딜 및 신기술과의 연계 강화('2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분야 선도기업이 훈련과정 함께 설계 ▶ 실천형 문제 해결을 통한 직업훈련 및 참여기업 채용연계 지원 	
산업현장 수요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학교육혁신센터 확대·개편 → 현장수요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 • 연간 100여개 기업을 산학협력 우수기업으로 인증 → 인센티브 제공(예: 공공입찰시 가점 부여 등) 	
교육·훈련 효과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훈련포털(HRD-NET) 확대·개편('21.4월) → ONE-STOP 정보 제공 • 성과중심 직업훈련 시장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기관별 성과정보 공개 의무화 ▶ 평가자 다양화(심평원 단독 통합심사→지역별 고용센터 사전심사·수요자 평가 반영) ▶ 신기술분야 훈련비 지원 강화(디지털 인력양성을 위해 신기술분야 훈련비 차등지원) 	

✓ 직업교육·훈련제도 포용성 확충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특화형 긴급 직업훈련 시범사업 확대방안 검토('21.10월) ※중소기업 사업주가 재직근로자에게 유급휴가 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비·인건비(고용부) 및 사회보험료 사업주부담분 50%(지자체) 지원 	고졸취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고 진학 후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을 위해 특화 직업능력개발지원 강화방안 마련('21.1.1) 예) 일반고 특화과정 진로·취업지원 프로그램 신설 및 디지털·신기술 분야 과정 확대, 직업계고·일반고 공동교육과정 운영 검토 등
고용취약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고, 프리랜서 등의 여건을 감안한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마련('21.1.1) 	저소득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 생계비 대부지원 확대 (6.7→9천명(필요시 추가 확대), '21.1.1)

✓ 한국판 뉴딜, 신산업 등 규제혁파 추진

-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 제도 개선 등 신속히 이행
- 핵심 신산업 5대 분야(DNA, 비대면, 기반산업 스마트화, 그린, 바이오·의료) 규제혁신
- 규제 샌드박스 5법 정비 신속 추진

✓ R&D 사업체계 효율화 + 차세대 핵심 선도기술 확보기반 구축

- 다부처 공동 R&D 사업 확대('20년 5.0 → '21년 6.6%) 및 혁신도전 프로젝트 추진(혁신·도전적 연구과제 대상, '21.1월~)
- 정부 R&D 중소·중견기업 부담률을 '21년 말까지 하향 조정하고, 산업별 R&D 민관 소통·협력체계 구축

안정 * 지속성장을 위한 미래대비

03 | 부문별[재정·공공·노동시장] 구조를 혁신하겠습니다

☑ 정부 재정·공공부문의 혁신 선도 및 노동시장 혁신 지원



안정 * 지속성장을 위한 미래대비

04 | 인구감소와 저출산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 제3기 인구정책 TF 가동

-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 영아수당 신설, 첫 만남 꾸러미 지원, 공공보육 확충, 다자녀 지원 확대 등 5대 핵심과제 마련 →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여건 조성
- (인구정책TF) 여성·고령자 경제활동 참여 확대, 다양한 가정형태를 지원하도록 제도개선 등 대책 마련

☑ 저출산 해소를 위한 출산·돌봄부담 완화



☑ 고령자 맞춤형 새 일자리(가칭) 도입 등 고령사회 적응성 제고

* (예) 65세 이상 단시간 근로자를 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하여, 기업이 고령자를 추가 고용해도 재정지원 사업의 지원요건은 그대로 유지

경제구조 포용성 * 공정성 강화

[뉴딜 고용·사회안전망]

01 고용·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 '21년 중 총 5.4조원 (국비 4.7조원)
+ 취약계층 금융·사회안전망 확충 병행





✓ 한국판 뉴딜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지속 추진

국민취업지원제도 본격적 시행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추진
I 유형	II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 수립 소득파악체계 구축 + 소득파악 주기 단축, 소득정보 공유 확대 등 기금 고갈 방지 및 고용보험사업 안정적 수행을 위한 재정건전화 방안 마련
취업지원 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50만원 x 6개월)	취업지원 서비스 + 취업활동 비용	
40만명	19만명	
산재보험 가입범위 확대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용직종 지속 발굴·확대 * ('21년)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22년) 간병인 등 검토 특고·플랫폼노동 종사자의 전속성 기준 개편('21.上)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본격 시행 '22년 시범사업 도입 준비

✓ 취약계층 금융안전망 3중세트 구축

특고·프리랜서 금융접근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속 업종별 단체 등을 통해 미소금융 소액대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개인사업자 햇살론 지원요건 합리화 (대출 전 2개월간 소득증빙→6개월로 확대) 		
정책서민금융 - 사회서비스 등 연계 강화	법정 최고금리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금융관리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 시 우대금리 제공(0.1%p 내외) 실직·질병 등으로 상환 곤란 시 대위변제 전 복지·고용서비스로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민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최고금리 인하(24→20%) 저신용 서민 대상 신용대출 공급 모범업체에 인센티브 제공 등 보완조치 마련('21.7월) 	

✓ 4대 사회안전망 [생계·의료·주거·교육] 확충

생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계급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1년 노인·한부모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약계층의 건강·의료보장 지원 확대, 흥부초음파·심장초음파 등 급여화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4.5→5.4만호), 신혼부부(5.2→6.0만호) 등 중심으로 공적임대 공급 확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을 위한 주거급여 신설(3.1만 가구)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교무상교육 전면 실시(2·3학년→전학년), 저소득층 교육급여·장학금 등 확대 	

경제구조 포용성 * 공정성 강화

02 | 코로나시대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필수노동자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다각적 노력 추진

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이돌보미 안전관리 매뉴얼 마련 및 서비스 지원기간·지원비율 확대로 수요 활성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단가 인상('20년 시간당 13,500→'21년 14,020원)
보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 파견인력 위험수당(일 5만원), 교육수당(15만원) 지급 등 간호사 근무여건 개선
운송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정 작업시간 관리, 맞춤형 건강관리 실시 및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협의회 구성, 산업 제도화·종사자 보호를 위한 「생활물류법」 제정 등 배달업 인증제 우선 도입 후 등록제 법제화 검토 대리기사에의 보험 중복가입 방지를 위한 조회 시스템 구축
환경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활용품 전용차량 사용기준 마련, 100L 종량봉투 제한 노후 재활용선별장 시설 교체 및 플라스틱 선별지원금 한시 인상('20.9~'21.2월)
콜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휴게시간 명시 등 관리지침 개선, 체온계·칸막이 등 방역설비 지원 및 휴게시간·휴가未보장 등 근로·안전감독 실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 강화

- 저신용·저소득층 대상 '교육비지원 대출'에 학원비 등 사교육비 포함(서민금융진흥원)
- 보다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비대출' 금리 인하(연4.5→연2~3% 수준, 서민금융진흥원)
- 저소득층 학생의 온라인 교육 지원을 위해 국가기관의 불용 PC 및 프린터 나눔사업 개선



아동→청소년→청년→노인 등 생애주기별 격차해소 지원

아동	청소년	청년	노인
발달장애 영유아 진단·지원을 위한 발달장애 조기개입 및 발달재활서비스 활성화	청소년 안전망팀 확대(지자체, 9→15개) 쉼터 청소년 자립활동비 및 자립지원수당 신규 지원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지원 내실화	기초연금 최대지급액(30만원) 지원대상 확대(소득 하위 40% 이하→70% 이하)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농어민 등 취약계층을 촘촘히 지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농어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일자리 확대(2.2→2.5만명) 장애인 연금지급 단가 인상(25→3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직업교육훈련 지원 강화 경력단절예방 전담팀 운영 등 경력단절위기 극복 지원 프로그램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월 최대 43,650→45,000원) 고령어업인 등 대상 수산공익 직불제 도입

경제구조 포용성 * 공정성 강화

03 경제 전반 공정성과 상생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공정경제 기반 공고화

- 공정경제 3법 입법에 따른 하위입법 추진계획 마련 등 제도 착근 노력 지속
- 플랫폼 생태계 공정성 확보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 제정 추진('21.1분기 국회제출)



✓ 상생가치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 중 대기업 선제진출을 막기 위한 일시정지 권고 등 도입방안 마련('21.下)
-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기간 경과 후에도 신청을 예외적으로 허용('21.上)



✓ 사회적 경제 육성을 위한 다각적 지원 강화





- 부처별 소규모·단발적 지원을 범부처 단계별·종합지원으로 개편('21.1월,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집중지원 사업)
- 사회투자펀드 조성액 및 민간투자비율 확대(250→500억원 / 20→40%)(('21.9월))



경제구조 포용성 * 공정성 강화

04 국민 안전과 삶의 질을 개선하겠습니다

✓ 안전국가 구현 및 국민 생활환경 개선노력 지속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교통안전	산업재해	정신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형 이동수단 제도 개선 <p>*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 예방시설 용자 적극 지원 • 첨단기술*을 접목한 화학사고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 추진 <p>* AI, 드론, 적외선카메라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확진자, 독거노인 등 고위험군 대상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 운영 <p>* 전문상담인 205명 신규배치</p> 
재난대응 및 생활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기술(IoT) 기반 재난대응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 지역배출원별 맞춤형 미세먼지 감축 대책 추진 	

✓ 소비자 편의 제고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불공정약관 시정 및 표준약관 제·개정	「서비스 가격표시제」 단계적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달앱, 렌터카 등 민원이 빈번한 생활 밀착형 시장의 소비자 권익 제고 <p>* 사전통지 없는 계약해지조항 시정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장 등에 서비스 가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서비스 가격표시제」 단계적 도입('21.3분기) <p>* 체육시설업 등 우선검토 후 적용업종 확대 추진</p>